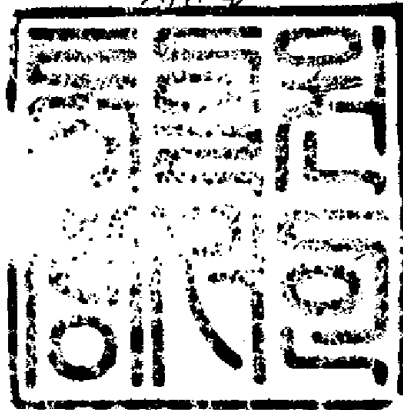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

3760
주요: (270 쪽)

저자명



82p.
23.00

북한교육, 신역
통일대비
통일교육
북한교육사상
북한교육원
북한교육과정

통일원

발간에 즈음하여

자유화·복지화·개방화의 세계사적 흐름과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통일은 이제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실현해야 할 현실의 명제이자 대비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하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원은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통일대비교육의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관심분야 등을 고려한 통일교육용 자료 8종을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소책자로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료에는 제1편에 공통 교육 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이해”를 수록하였고, 제2편에는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이해”(문화·예술인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등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사계 전문가의 글을 분야별로 각각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통일 문제와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며 통일을 준비할 태세를 하나씩 갖추어나가는데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게재된 내용은 통일원의 공식적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침언합니다.

1995. 4. .

교육홍보국

●●●●●●●●
차 례

제1편 통일문제의 이해..... 7

I. 머리말 / 9

II. 통일 논의의 기본 전제 / 10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III. 우리의 통일 노력 / 1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대북 정책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1

제2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 25

I. 북한의 교육 실상 / 27

1. 북한의 교육관
2. 교육 제도
3. 교육 과정

4. 북한의 교원

II. 통일 대비 교육 과제 / 67

1. 민족공동체 건설
2.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
3. 민주시민 정신 함양
4. 통일에 대한 이해와 준비

참고문헌 / 79

제 1 편

통일문제의 이해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II.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통일의 당위성

우리에게 통일이란 명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동서독이나 남북에겐 통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몇가지 이유를 들면¹⁾

첫째, 남한 사회의 발전이다.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 내의 계급혁명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목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우리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우려로부터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로서 통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남한의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으로 특징지어지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1) 박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17.

가 되었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경제적 피폐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417~432 및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장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³⁾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남북한의 7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만일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의 역량은 분산되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민족의 웅비를 기약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재결합하지 못할

3) 정용길,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33-37.

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1) 기본 철학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민족이 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며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제반 정치적 기본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 집단화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일원화된 정치활동을 펴며,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마저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국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 발전의 맥락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정을 볼때 남한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것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우선 자주성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스스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이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화란 바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무력전쟁이 되풀이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언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노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토적·제도적·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적대감과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의 바탕 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방식으로 그 주안점을 변화시켜 왔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 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일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남북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냉전의 껍질을 깨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므로써, 남북한이 협력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Ⅳ.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혼치 않은 민

족발전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빈칸으로 남았던 민족발전사의 공백 기간을 메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국민의 손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제 2 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

박 덕 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북한의 교육 실상

1. 북한의 교육관

(1) 교육의 이념과 목표

북한의 교육이념은 북한의 헌법(1992. 4. 9 최고인민회의 의결) 제3장 문화에서 제39조내지 제57조까지에 명시한 정책,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제63조, 제73조, 제74조 등을 바탕으로 하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 및 문헌 내용이 곧 이념이 된다.

공산주의에서는 교육을 인간의 잠재력, 창의력, 개성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교육이 인간을 개조하는 '정치사업' 혹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인 '혁명과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교육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로 그리고 교원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사상·문화교양의 수단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사상혁명의 핵심적인 방법이며 내용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사상혁명이란 이름으로 광범위한 정치교화를 실시하는 핵심적 수단이 바로 교육인 것이다. 사상혁명이란 바로

넓은 사상을 뿌리뽑는 인간개조 사업으로서 공산주의의 완전 승리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는 개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가운데서 특히 사상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북한은 정치사상교양을 '장권유지를 위한 사상투쟁'으로 보면서 북한체제의 존립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학을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2년에 개정된 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요구하는 인간형은 혁명적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인간성은 혁명적 정치의식이 강하고 집단과 조직의 목표에 헌신적이며, 노동과 기술을 존중하는 인성(人性)의 소유자라 볼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인간이다. 개인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만 전체를 대표하는 김일성부자만이 모든 가치를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직 김일성부자만을 따르는 효자와 충신이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전형이 되어왔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이념만이 공인되고 있

다. 이 이념은 개인의 의식과 행동까지 포괄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교시는 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관철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후대들을 김일성에게 목숨바쳐 충성토록 하는 교육은 주체사상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서 모든 분야의 지도지침이 되고 있듯이 교육에서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표어가 최고의 지도원칙이 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체' 혹은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척도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도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정통(正統)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북한에서 '사회주의교육'이란 용어를 나름대로 개념화한 것은 1968년 3월 김일성이 교육부문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비롯된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에 적대되는 사상인 낡은 사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부르조아 자본주의 사상이 특히 교육 부문에 만연되어 있다."고 질책하고 낡은 부르조아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의 교육학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이 여러차례 사회주의 교육학의 창조와 실천을 촉구하는 과정을 거쳐 1976년 4월에 탁아소 및 유치원 교육을 법으로 규정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1977년 9월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

이라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다.

이 교육테제는 5개의 장(章)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 제2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제4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는 이미 지적한 대로 모든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책노선으로서 첫째, 교육에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구현, 둘째, 교육에서의 주체의 확립,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그리고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진행의 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테제 발표일인 9월 5일을 ‘교육절’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에도 이를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의 참다운 교육강령이라 하여 이에 충실한 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은 그 이전보다 더욱 교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모든 교육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우선 시킬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제도와 내용, 방법 등 제반 교육관련 사항들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학교별, 대상별, 개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교육학에 반영시키려 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조화

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사상체계의 도입이 사회주의적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의 일반적 교육원리가 희생되는 대신 김일성교시라는 주체사상의 교리가 북한 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다. 주체사상에 충실한 교육은 역설적으로 비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해 내는 정치교화의 방편으로 되었는데, 그것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학습이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등장하면서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후계이론을 내세워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교육을 본격화하였다. 인민학교에서부터 '김정일 따라배우기 운동'을 시작하여, 1985년에는 각급 학교 교과과정안에 김정일 우상화 교과목이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이 교육부문을 관장하여 제반 정책수립과 집행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관련 집회에서는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로 주체 교육의 화원이 개화 만발했으며, 대학생들은 해바라기와 같이 오직 김정일만을 충직하게 따라야 한다.'는 '결의가 나온 바 있다.

(3) 교육정책의 특징

북한의 모든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한다. 그밖의 각급 지방당 및 교육기관에 조직되어 있는 당기관들이 교육의 세부사항을 통제한

다. 따라서 북한은 당에서 결정된 제반 정책들을 즉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고 있다. 당기관들은 항상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또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사로청) 등 당의 외곽 단체들도 교육사업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당의 통제에 의해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교육원칙이 철저히 반영되고 있다. 집단주의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단주의 교육원칙은 그 목표와 정책, 내용과 방법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집단주의 교육에서는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전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개성과 소질과는 관계없이 모두를 집단에 소속시켜 ‘수령과 당’을 무조건 따르는 정형화된 인간을 기르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에는 각 연령층에 걸쳐 집단적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이 있다. 인민학교에는 ‘소년단’ (7~13세), 고등중학교와 대학 단위에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14~30세)이 노동당의 외곽 청소년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학생은 ‘붉은청년근위대’, 대학생은 ‘교도대’와 같은 준군사 조직에 망라된다.

북한은 조기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어린 나이에서부터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을 본격화한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해 대부분의 유아는 태어난 지 빠르면 30일부터는 탁아소에서, 만 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양육·교양되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6조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이야말로 조기 교육단계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학습을 제도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조기교육을 강화한 것은 정치사상의 주입과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이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과 군사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헌법 제44조에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고 명시하고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도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959년부터 '학생 사회의 무로동'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동원이 정규교육의 일환이 되었다. 학생의 수업료 면제 역시 바로 학생사회 의무노동제의 채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의 노동력동원은 대학생에서 인민학교 학생에까지 적용된다. 각급 학년별로 연간 무보수의 의무노동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1일 작업량도 할당된다. 대학생은 연간 3개월,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고등

중학교 학생은 연간 4~8주,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의 의무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에게 규정된 의무노동 시간은 있지만 실제로 노동참여시간에 제한은 없다. 왜냐하면 긴급을 요하는 과업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학생들을 수시 동원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생들은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집단생활을 철저히 익히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그리고 대학에는 1959년에 '대학로농적위대'로 발족하였다가 1974년에 '교도대'로 개편된 군사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이 되면 교내 군사조직에서 정규군 못지않은 고도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매주 실시되는 교내 군사훈련 이외에 야외훈련 및 입영훈련까지 받고 있다.

2. 교육 제도

(1) 학교교육의 목표

북한은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학교 입학 전에 1년간의 무교육을 실시하며(유치원 높은 반 1년) 그후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과정을 합쳐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취학전 모든 이

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며, 학교교육에서는 사상과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학교 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인민을 혁명적이고 노동계급의 모범자로 변형시킨다.

② 인민은 반드시 공산주의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공산주의와 혁명적 사상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 교육을 어렵게 하는 것뿐이다.)

③ 교육은 반드시 혁명적 실제와 연관 되어야 한다. 이론을 위한 이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쓸모가 없다. 이는 곧 교육은 항상 실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책임을 지닌다. 이는 사회주의교육이 사상적·문화적 교양의 무기이며, 국가는 이를 항구적 교육을 위해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할 임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2) 학제

북한의 학제는 4-6-4제의 기본 학제를 유지하면서 성인교육과 특수교육의 특별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학교체제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3~6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우리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4년,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박

사원 2년이 있다.

유치원의 경우 낮은반 1년과 높은반 1년으로 구분하여, 낮은반 1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나, 높은반 1년은 의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민학교는 우리의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초등교육단계로서 수업연한은 4년으로 비교적 짧다. 다음 (그림 1)은 북한의 교육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상자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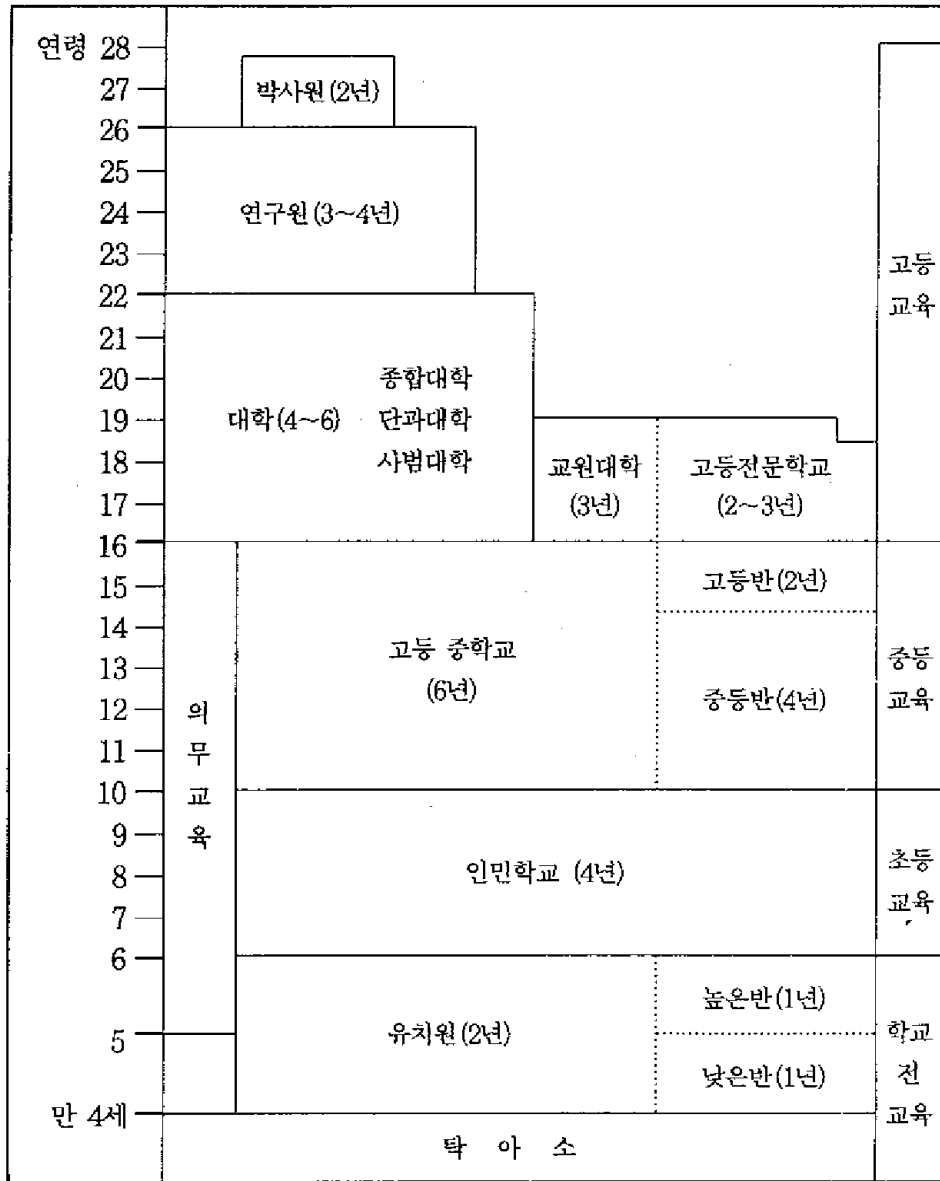
고등중학교는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형태로서 중등교육단계에 해당되며, 편의상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75년 9월부터 이른바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해 11년동안 무상으로 운영되는 의무교육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1984년부터 북한에서는 각 지역별로 하나씩의 소위 “일류 학교” 또는 “모범 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평양에는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자연과학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만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직접 학생 선발을 하게 되는데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중 시험에 의하여 60% 정도만 합격시키고 탈락자는 차등급 학교로 보내진다. 지방에도 이와 유사한 도단위로 제1고등중학교가 있으며 주민들은 이런 학교를 영재학교라 부르고 있다.

1988년부터는 유치원에서 우수한 어린이를 선발하여 모

[그림 1] 북한의 교육 제도



자료 : Birgit Rek : Bildungsbericht über Nord-Korea (1992), 32쪽.

범학교식 수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는 한 학년이 1학급 또는 많아야 2학급으로 소수 정예교육을 시키

고 있다. 또 하나의 영재교육방법은 전국의 고등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을 선발 평양의 일류 고등중학교 4~6학년의 기숙사에 입사를 시켜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예·체능 등 특수교육은 정무원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부와 국가체육위원회 등에서 각각 운영한다. 각 지역의 유치원에서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거나 재능을 보이면 선발되어 평양의 특수 유치원에 보내지게 되며, 유치원 졸업시에는 문화예술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게 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각각의 능력을 인정 받으면 음악 또는 미술 대학에 보내진다. 지방에도 음악 및 미술 전문학교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보통의 정규 학교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기 영재아 발굴과 특수 교육체제는 오히려 일부 주민을 특별한 사회계급으로 고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어교육은 인민학교 4학년부터 시작되며 러시아어와 영어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들어 영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고등교육과정은 대학(4~6년)과 그위의 연구원(3~4년), 박사원(2년)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밖에 교원대(3년)와 고등전문학교(2~3년)가 있다. 이런 정규학교 이외에 노동현장에 설립된 공장대학이나 농·어장대학 등 성인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등이 있으며 교원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4년제

이다. 교원대학은 명칭 그대로 인민학교 교원과 탁아소·유치원의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고, 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교원을 양성하는 제1 사범대학과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는 제2 사범대학으로 나뉜다.

각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의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한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종합대학 등 일반대학보다는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더 희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원이나 행정간부가 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잡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까다로운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치뤄야 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권층 자녀들은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이 부여된다.

1980년대 이후 매년 수십개의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1977년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발표 이후, 15년 동안 대학은 130개가 더 늘어 모두 280여개 교가 되었다. 그 중 공장대학은 2.2배가 증가하였으며, 고등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킨 것도 많다. 현재 북한에는 약 560여개로 추정되는 고등전문학교에 16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것

〈표 1〉 북한의 학교수

구 분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대학	대학
학 교 수	28,358	19,262	4,792	4,738	473	235

자료 : 「조선개관」(평양 : 외국문출판사, 1987)

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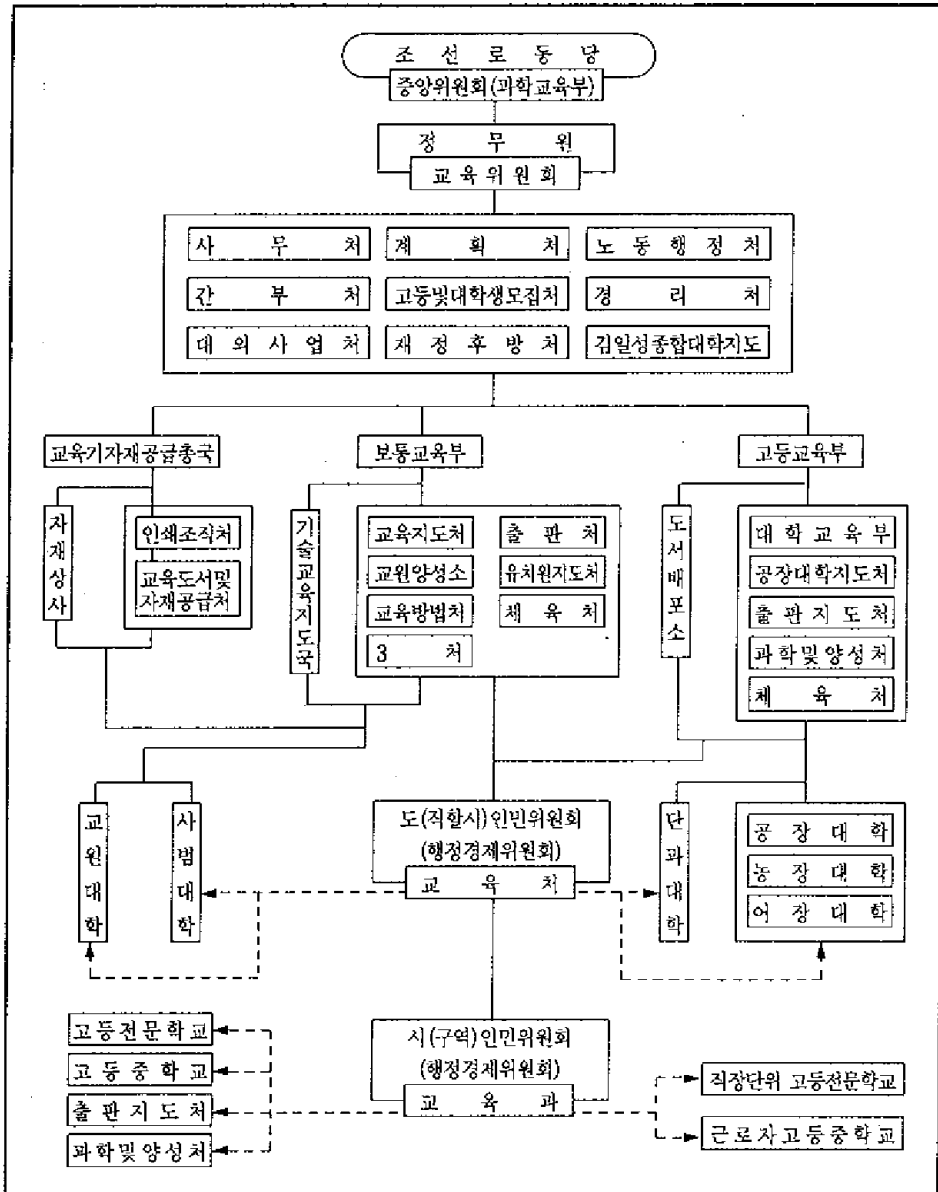
북한은 각급 학교와 학생수에 대한 통계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각종 보고문이나 선전물 등에 가끔 단편적인 교육관련 수치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1987년 10월 평양 '외국문출판사'가 해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조선개관』(일어판)에는 학교와 학생수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고 있는데 이것이 숫자로 된 가장 구체적인 발표이다.

(3) 교육행정 제도

북한의 각급 학교는 당의 정치도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제도 역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인 과학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다. 과학교육부가 수립하는 교육정책은 형식상 비서국을 거쳐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이를 집행하는 곳은 정무원 산하기구인 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다음 (그림 2)는 교육행정 조직도이다.

교육위원회는 남한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의 중앙기관으로서 사무처, 계획처를 비롯한 8개처와 김일성종합대

[그림 2] 중앙 및 지방교육 행정조직



자료 :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1988), 406쪽.

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육부는 기술교육지도국, 교원양성소, 교육방법처,

유치원 지도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교육부는 공장대학지도처, 출판지도처, 과학 및 양성처, 체육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단과대학 등은 시·도행정경제위원회의 교육처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만 교육위원회 직할기관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근로자 고등중학교 등 유아·초등·중등교육기관들은 시·군 행정경제위원회 안에 있는 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

중앙의 교육위원회는 그 명칭이 여러번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48년에는 교육국, 1954년에는 과학 및 학교 교육부, 1960년에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1973년에 현재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위원회는 출판, 도서, 교육을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편성과 구체적 시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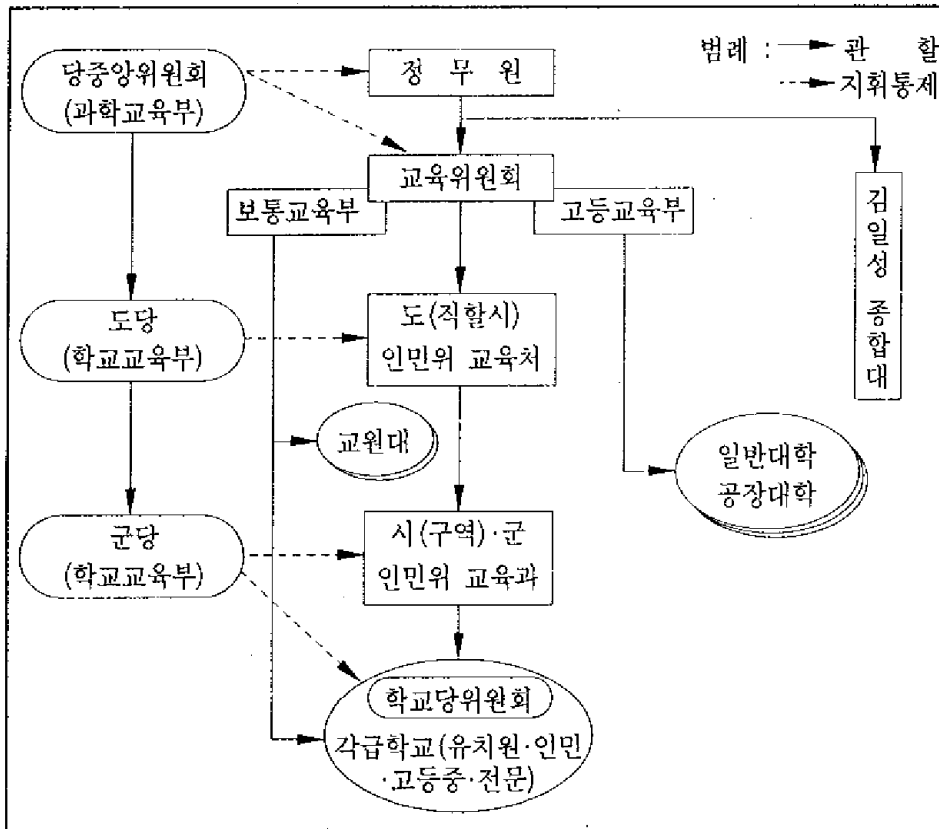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은 교육위원회이다. 노동당의 지시와 감독 아래 운영되는 정무원(행정부에 해당)산하 중앙 행정각부의 하나인 교육위원회는 각급 지방 행정경제위원회의 교육처와 과를 지도한다.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지방당 조직으로서 도당과 군당이 있으며, 지방당 조직내에는 학교 교육부를 두어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정무원은 노동당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있고, 당 중앙인민위원회의 과학교육부는 각급 지방당의 교육부를 지도하며, 각급 지방당 위원회는 해당 지역내의 지방 행정경제위원회에 대한 통제를 통하

여 교육을 지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행정 조직 및 체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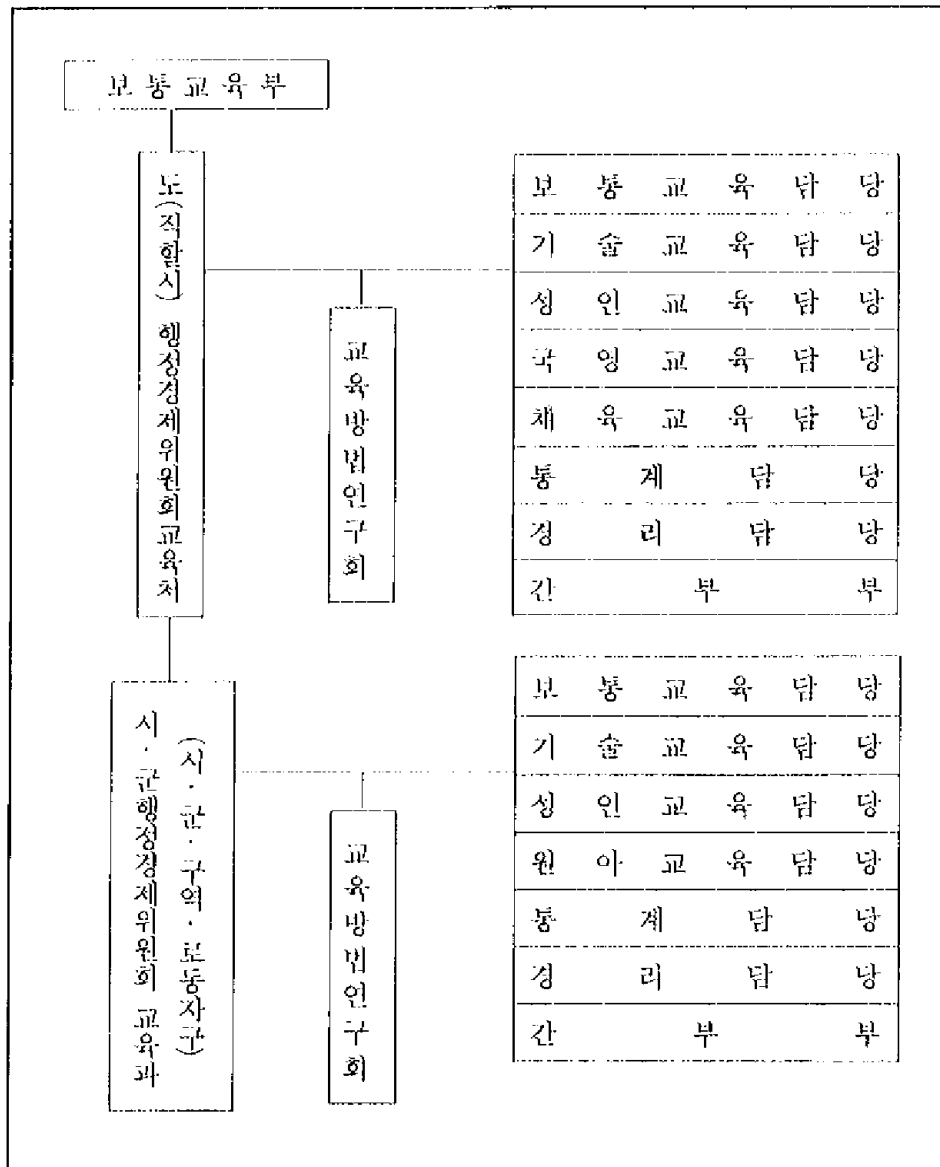
북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결정과 행정집행 과정을 정리해보면,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면, 산하 비서국의 과학교육부에서 지도·감독하며 이러한 정책 기본 방침에 의해 정무원의 교육위원회에서 구체화하여 집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집행은 지방교육행정 전담조직인

[그림 3] 교육행정 조직 및 통제체계



자료 : 통일연수원, 「북한아해」(1995), 216쪽.

[그림 4] 북한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조직



자료 :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1993년), 91쪽, 참조.

시·도 인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의 교육처와 시·군구 인민위원회의 교육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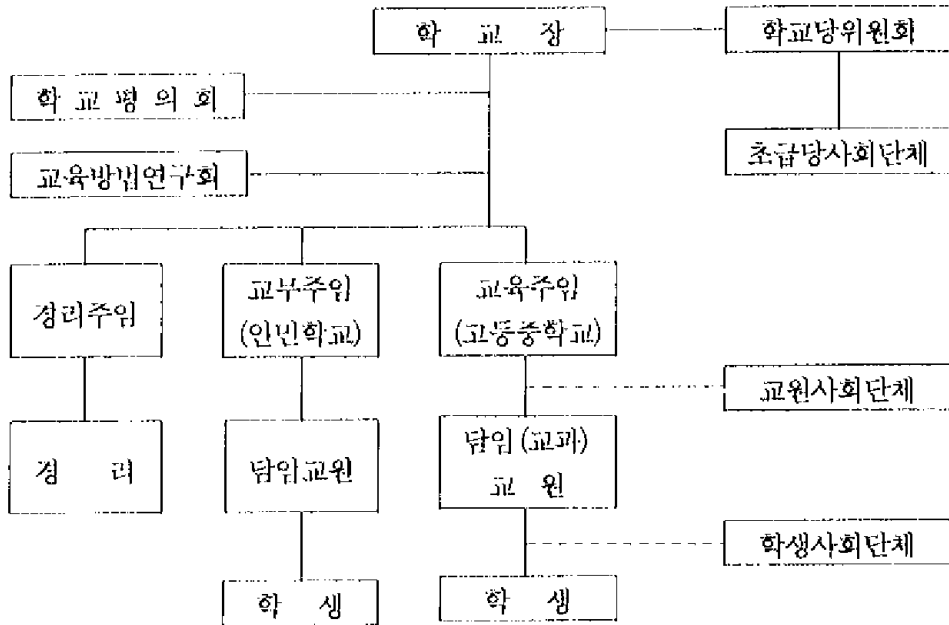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행정 집행 과정은 당조직의 과학교육부와 도·군단위 도당과 군당에서 지도·감독하며, 공안과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소와 사회안전부에서도 관여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감시와 감독을 하는 교육행정 통제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교육에 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학교당위원회 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학교장은 당 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학교교육부서에 대해서도 학교 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지방 교육행정 조직은 위의 (그림 4)와 같다. 도와 직할시의 교육처에서는 고등전문학교, 고등기술학교(야간 및 통신포함), 교원대학을 직접 관장하고 군교육과에서는 도교육처의 지시를 받아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유치원을 관장한다. 시·도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교육방법연구회를 비롯하여 보통, 기술, 성인, 국영, 체육교육담당 등이 있고, 시·군·구 인민위원회 교육과는 교육방법 연구회를 비롯하여 보통, 기술, 성인, 원아 교육담당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결과적으로 단위 학교로 연결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학교의 경영조직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학교장 밑에 학교 평의회, 교육방법연구회 그리고 경리주임, 교무주임(교육주임) 등의 조직이 있다. 그리고 학교장과 평행선상에 학교당위원회가 있어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며, 학교당위원회 산하에 교원과 학생의 사회·정치활동 조직이 있다.

[그림 5] 북한의 학교행정 조직체계



자료 :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1993년), 92쪽.

학교 조직내에 있는 학교평의회는 법규상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데 매월 1회이상, 그리고 학기 및 학년초, 학기말에 1회 이상 교직원과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의 회의를 소집,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고 균중적인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학교 조직내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학교장과 해당 당 세포와의 관계인데 학교장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처리하기에 앞서 반드시 노동당에서 파견되어 나온 당세포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 간부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정례화하고 있다.

3. 교육 과정

(1) 교과 과정안

북한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은 김일성부자 이상화와 혁명 의식 고취등의 정치사상 내용과, 생산과 건설에 유용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적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점은 각급 학교의 교과 과정안과 교내생활의 전반적 내용속에 잘 나타나 있다. 교과 과정안에 의하면 만 6세에 입학하는 인민 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동독의 기초학

〈표 2〉 인민학교 교육과정 편제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김일성어린이시절	152	1	1	1	1	1	1	1	1
김정일어린이시절	152	1	1	1	1	1	1	1	1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외 국 어	37							1	1
수 학	834	5	5	5	5	6	6	6	6
자 연	222					3	3	3	3
체 육	304	2	2	2	2	2	2	2	2
음 악	304	2	2	2	2	2	2	2	2
도 화 · 공 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자료 : 통일원, 「'92북한개요」(1992), 332쪽.

교 4년간 배우는 3,200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이다.

인민학교의 교과과정은 통합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

〈표 3〉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김일성혁명활동	150	2	1	1			
김일성혁명역사	195				2	2	2
김정일혁명활동	112	1	1	1			
김정일혁명역사	110				1	1	1
현행당정책	102				(34)	(34)	(34)
국어문학	769	5	4/5	4	4	3	2
한국문학	251	2	2/1	1	1	1	1
외국어	591	3	3	3	3	3	3
역사	280		1	2	2	2	2
지리	344	2	2	2	2	2	
수학	1,283	7	7	6	6	6	7
물리	549		2	3	3	4	5
화학	381			2	2	4	4
생물	410		3	2	2	3	3
체육	309	2	2	2	2	1	1
음악	143	1	1	1	1		
미술	76	1	1				
여학생실습(여)	210	1	1	1	1	1	1
기계조작실습(남)	197						
제도	60				1	1	
실습: 전자기계	120				(36)	(50)	(34)
선택과정	100					(26)	(74)
계	6,742	27	31	31	34	34	34

주: ()는 학년별 연간 수업일수.

자료: 통일원, 「'92북한개요」(1992), 333쪽.

기에는 부족하며 교과영역별 경험의 전수가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 인민학교 교과목 구조상의 특징은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 두과목의 시간 배당이 모두 57%나 되나 자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경시되고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6년간 수학 등 총 21개 과목에 걸쳐 6,742시간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고등중학교의 학과 영역별 비중은 수학을 위시한 과학계통이 단연 높으며 다음이 어문과목과 정치사상영역의 순이다.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도 역시 통합적 경험보다는 교과영역별 지식·경험을 전수하기에 맞도록 꾸며져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공히 교과과정에 정해진 수업일수와는 관계없이 정치조직주관의 사상교양사업, 군사훈련이나 노동에 참여하는 등 집단적 조직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과목 수업 이외의 전체적인 학교교육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1985년부터 인민학교에 '김정일 어린시절 따라 배우기' 과목이, 고등중학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와 '혁명활동' 등 2개의 과목이 새로 교과과정에 추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동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에 잡사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쳐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련·동구 국가들의 역사교육을 중단하는 등 학습교재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2) 교육 내용

언어, 수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학교의 주요 교과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상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모두가 유일사상을 찬양하고, 단일지도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국어교과를 위시하여 몇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 어 ◇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주제별 단위 분포를 보면 우선 국어 교과서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학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70%정도가 사상교육과 연관된 단위들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국어(국어문학 포함) 과목에 수록된 정치사상교육 내용의 기술방법을 분석해 보면

첫째,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방법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 단원의 주인공으로 삼는 방법이다.

시, 소설, 평론, 희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약 40%정도 된다.

나머지는 김일성 부자를 화두(話頭)로 삼아, 역시 그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색화 되어 있다.

둘째, 순수한 언어적 기능이나 문법적 내용을 설명하는

단원에까지도 대부분 김일성 부자의 말을 먼저 인용한 후에 글을 이끌어 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 이러한 단원의 끝맺음에는 김일성 부자의 은덕에 대한 감사와 다짐이 부가되기 일쑤다.

① “우리는 짧은 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인민학교 1-2, 국어 제12과 ‘짧은 글짓기’ 45쪽)

② “무엇보다 먼저 편지 내용에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에 대한 충성심이 잘 나타나도록 써야 합니다.”(인민학교 3학년, 국어 제8과 ‘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26쪽)

③ “기행문과 견학이나 답사를 하는 곳에 짓든 경애하는

〈표 4〉 북한의 사상교육 비중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김일성 이상화	5(17%)	5(19%)	6(33%)	16(22%)
김정일 이상화	3(10%)	3(12%)	3(16%)	9(12%)
김일성 가계 이상화	2(6%)	2(12%)	2(10%)	10(13%)
대남, 대미·일 적개심 교취	5(17%)	3(12%)	1(5%)	10(13%)
공산주의 도덕교양	6(20%)	4(15%)	2(10%)	12(6%)
문법·낱말 등 언어 생활	9(30%)	7(27%)	5(26%)	21(2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북한 국어교과서 분석」, 2쪽.

수령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현명한 령도,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가슴 뜨겁게 안가도록 써야 합니다.”(인민학교 3학년, 국어 제25과 '기행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80쪽)

④ “먼저 글을 읽을 때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빠뜨리지 않게 정중히 읽어야 합니다.”(인민학교 4학년, 국어 제11과 '읽기에서의 속도', 33쪽)

⑤ “우리는 일기를 쓰면서…아버지 원수님과 지도자 선생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였는가…”(고등 중학교 1학년, 국어 제14과 '하루 생활과 일기', 70쪽)

⑥ “수련은…아버지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아버지 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에 관철하는 대로 불러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제17과 '국어소조활동과 구연', 79쪽)

⑦ “기행문은…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동하게 펼쳐 보인다.”(고등중학교 2학년, 국어제5과 '견학·답사의 기행문 쓰기', 18쪽)

각 학년 교과서의 제1과에서는 한결같이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시(詩)를 게재, 의식 선점의 방법을 쓰고 있

다.

김일성 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정치사상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인민학교 1학년 '보고싶은 원수님', 3학년 '김일성 장군의 노래', 고등중학교 1학년 '조국의 품', 2학년 '축복의 노래' 등이 그 예이다.

대부분의 동화들도 공산주의 덕성 함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이 동화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께서 몸소 들려 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는 사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교과서 편집에 동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

통일 후 독일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구동독 지역의 학생들이 역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통일후를 내다 볼때 북한의 역사교육에서도 이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과거사야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다하겠지만 최근의 일까지도 모두 바꾸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위치를 지키려 하고 있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먼저 조선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문을 발췌해 보기로 한다.

〈고등 중학교 2학년〉 - 1984년

① "조선혁명을 잘하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머리말 4쪽)

②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풍부화 된다." (22쪽)

③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 주권을 쥐었는가 못쥐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38쪽)

④ "낡고 발전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새 것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입니다." (52쪽)

⑤ "고구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배웠으며, 용감성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높은 민족적 긍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닐 수 있었으며, 아세아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수나라의 300만 대군의 침습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9쪽)

⑥ "종교는 돈 있고 권세 있는 놈들이 인민들을 착취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써먹는 아편이다." (91쪽)

〈고등중학교 3학년〉 - 1982년

① "사람은 로동 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0쪽)

② "오직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인 로동 과정에서만 재부

가 창조되고 로동도구가 끊임없이 개량되어 나가며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15쪽)

③ “리기주의 사상은 사적 소유에서 생겨났으며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가 시작된 때부터 착취계급의 사상으로 되었습니다. 리기주의는 아주 나쁜 사상입니다.”(20쪽)

④ “과거에는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 통치배들이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로부터 강제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반 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었습니다.”(24쪽)

이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 교과서 내용은 교시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계급 이념적 색깔로 채색되어져 있다.

◇ 음 악 ◇

‘남북의 창’ TV프로그램을 보면 북한의 어린이들이 고음의 노래를 유희와 함께 잘 부른다. 민속음악이건 서양음악이건 구소련의 영향으로 빠르고 높은 음의 김일성·김정일 찬양가이다. 순수예술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민속음악의 경우에도 비록 악기만 고전일 뿐, 그것도 상당 부분 개량된 것들이다.

지난 1990년 12월 ‘90년 통일 전통 음악회’에서 보여준 북측의 민속음악은 우리와 어느정도 다른가를 여실히 보여준 실예이다.

학교음악의 경우 인민학교에서는 4년간 충성가요가 57개

곡 기타 11개곡으로 되어 있다. 노래를 가요라고 하는데 인민학교의 가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 '김일성 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로동당을 세워주신 원수님께 인사드려요',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에 가요', '원수님 초상화', '김일성 원수님께 맹세드려요', '꼬마땅크 나간다' 등의 노래와 '혁명군은 왔구나',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등의 감상곡이 많으며 가사중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의 이름은 반드시 큰 고딕체로 표시하고 있다. 혁명가요에 해당하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어데까지 왔니
어데까지 왔니 숲속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나 고개넘어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왜놈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혁명가요의 가사에는 '왜놈'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활동을 혁명의 모범으로 삼기 때문에 그 혁명 정신을 찬양하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적개심에 찬투로 '왜놈'을 쳐부수는 노래를 한다는 것이다.

입고 미운 지주놈
악독한 지주놈 피 맺힌 원수

오늘도 남녘땅에 남아 있지요.
원수님의 충직한 아들딸이 되어
지주놈을 모조리 쳐부실래요.

3학년 : '원수님의 사랑 노래 불러요', '각별 빛나는 공화국 깃발', '지도자 선생님께 영광드려요', '장군님 가시는 길에 비단마음 펼치셨네' 등.

조선의 영웅

내조국 탐내어 달려든 원수
미제를 한놈도 놓치지 마라
바위도 불타는 고지우에서
영웅의 총은 불을 뿜었네
수령님께 충직한 조선의 영웅
사회주의 우리 조국 지켜 싸웠네

(3) 교육방법

교육테제는 교육방법으로서 '깨우쳐 주는 교육', '이론과 실천 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조직생활·사회정치 활동의 강화' 그리고 '학교전교육·학교교육·성인교육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을 위해 집단교육, 반복교육, 조기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화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주의 교육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때문에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 사상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학교내의 정치조직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시간, 이념학습, 조직규범에 대한 강의시간을 갖는다. 조직을 통한 정치사상 교육에서는 '긍정적인 학습법'을 장려한다는 취지하에 인내력, 지구력 그리고 자발심을 고취·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집단주의 교육방법뿐 아니라 이의 실천이나 생산활동과의 결합도 중요시한다.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시킴으로써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혹은 '산 지식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수시로 생산노동에 동원하거나 혹은 집체적 군사훈련에 참여시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교육방법의 실시는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거나 외부환경에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적합치 않다. 어떤 인간이든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독창성과 자율성은 위축되게 마련이다. 또한 교육과 훈련에서의 획일성요구는 비인간화 현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은 조건반사(條件反射)적인 인간집단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인간집단을 양성하는 데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4. 북한의 교원

(1) 교원양성 제도

북한의 학교에는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교원대학 졸업자에게는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 내에 이직을 할 경우 학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전직 교원을 재임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 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는 교원들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이 교원들의 이직율이 높은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그런 상황인 것처럼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서 하나는 낮은 보수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교원들이 엄중한 사상무장과 이의 실천이라는 어려운 임무 때문이다. 사상무장과 실천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활동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원들의 이직을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교원은 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전문성 또는 교육적 의지를 펼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의 경우 여자교원이 전체의 70~80% 가까이 되어

남자 교원을 더 많이 임용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에 5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교원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군복무 중에 받는 보수가 교원보다 높아서 군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므로 남자 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원양성 기관은 평양의 "김형직사범대학"이 있으며, 이 대학은 인민학교 교원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양성하는 기관이다. 북한의 대학들은 모두 대학교수를 양성할 수 있는데, 자체 교수요원 확보방안이기도한 교수 양성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각 학과의 학생 중에서 2년간 계속 교육을 받게 해서 자체 임용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지방의 전문학교 졸업자는 1년간 대학교수과정의 통신 학습을 받으면 된다.

교원교육의 개혁은 1988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두개의 교원양성기관을 설립하여 교육대학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과정에는 8학년(지방에서는 10학년)까지의 교원양성과 사회교육체제에서의 교육자양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도시 즉 평양, 김책시 등의 학교와 지방학교간에 교육절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에는 각 지역마다 두개의 교원대학과 두개의 교원 양성기관이 있다.

북한의 교원 교육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사회주의 교육학을 체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아동에 대한 교육

적 이해, 교육학적 지식,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능력·기술보다 공산주의 교양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이 1962년에 행한 「보통교육사업을 개선 강화 할 데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공산주의적 품성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졸업시켜 교원으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공산주의적 품성을 갖추지 못한 교원은 아무리 많이 양성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공산주의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주의 교양교육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교육학과 심리학의 이론도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전공별 과목이외에 대체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표 5> 사범계 대학의 교과목과 시간수

구 분	과목명	수업 시간수	비 고
공 통 과 목	• 당 투쟁사	260	(자연계 : 70) (1학년) (2학년)
	• 마스-레닌주의	260	
	• 정치 경제학	180	
	• 철학	140(인문계)	
	• 군사학	*	
	• 교육학	260	
	• 심리학	80	
	• 조선문학	120	
전 공 과 목	각 전공별 영역	400	
계		1,700	

자료 : Birgit Rek : Bildungebericht über Nord-Korea (1992), 23쪽.

계급투쟁에 관련되는 과목을 필수로 하고 있다. 사범계 대학의 4년간 공통 필수과목으로서, 당 투쟁사가 260시간, 막스-레닌주의가 260시간, 정치 경제학이 180시간에 달해,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교육에 관련된 과목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년제 교원대학에는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학과와 인민학교 체육교원을 양성하는 체육학과,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교양원 학과와 체육무용 학과가 있으며, 그밖에 통신학과와 재교육반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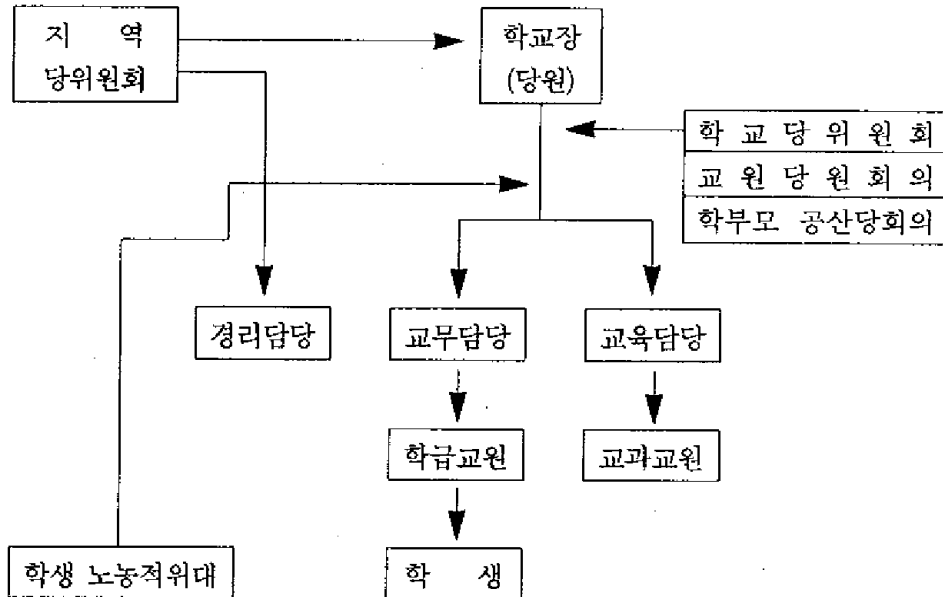
이 대학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에 주력하면서, 사회주의 아동심리학과(구소련의 사회주의 심리학을 번역한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문학, 과목교수법, 교육실습, 노래와 춤등 예능 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학교조직과 교직생활

학교조직은 교육행정이라는 법적인 체제 즉, 가장 인간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영조직상 효율성을 고려하는 체제가 아니라 철저히 당 우위 체제 유지를 위한 계급조직으로 되어 있다.

다음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내 교원조직은 당 지도체제의 하부 조직이다. 교장은 지역 당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 당위원장이 임명한다. 당원이 아닌 교원은 교장이

[그림 6] 북한의 교원 조직



자료 : Birgit Rek : Bildungebericht über Nord-Korea(1992), 23쪽.

될 수 없다. 교장의 임무는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상 생활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일이다. 교무담당 교원은 지역 당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지도 감독은 물론 교장에게 받는다. 교원들의 행동규범으로 “학교 내부 질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교원들은 매일 자신의 학생 지도활동에 대한 보고서인 “자기 비판”을 제출해야 한다.

교원들은 사회봉사를 기본 임무로 수행해야 하며 모든 교원들은 각기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 등과 같은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표 6〉은 북한 교원들의 교직생활의 전모를 정리한 것이

〈표 6〉 북한 교원의 교직생활

구 분	내 용
교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교양, 당정책 학습, 혁명전통 학습 등의 각종 학습 • 경험교환회, 교육방법 연구회, 교수 참관 등의 교수방법 익히기 • 각종 단기 학습과 교원 재교육
정치·사회 단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당원인 경우 학교의 조급 당위원회 조직, 학교내의 공산주의 교양과 김일성유일사상 학습활동 지휘·감독, 월 1회 이상 학습회 개최, 공개 비판·자기 비판을 통해 사상 검토 • 30세 미만 청년교원 중에는 사로청(조선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에 가입 활동, 각종 정치교양사업, 중산투쟁운동, 청년작업반 운동, 천리마운동 등에 동원 • 모든 교원은 『직맹』(조선 직업 동맹)내 『교직동』(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에, 여성 교원인 경우에는 또한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에 의무적 가입, 여러 가지 학습이나 '사회봉사' 라는 이름의 각종 생산 사업에 투입
각종 정치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 교원은 '인민반'의 학습강사로, '근로자 학교'의 교원으로 성인의 사상교양 담당원 역할 • 고등중학교 교원은 리·동의 선전원으로 정치학습 지도, '근로자 중학교'의 교원 역할

자료 : 북한 연구소, 『북한 교육론』(1978), 344~346쪽, 『북한 총람』(1983), 1298쪽 이하.

주 :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약칭 교직동)은 1945년 11월30일에 설립된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산하에 9개 부문별 직업동맹의 하나인. 직맹 산하에는 금속기계, 화학, 건설·임업, 광업·동력, 정공업, 상업, 교육·문화, 운수·수산, 공무원 직업동맹이 있음.

(참고 : 한국교육신문, "북한의 교원·교원단체" 1992. 10. 28)

다.

(3) 당의 도구로서의 교원

1950년대 남한의 교원들도 한때 동원되었던 지역 사회계몽운동이 북한의 교원들에게 학교교육 외에 더 부과되어 있다. 교원은 당의 도구로서 사회주의 국가이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계몽자'로서 주민의 사상교육까지도 맡고 있다. 이와같은 역할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테제는 교원 스스로 먼저 혁명화·노동계급화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원들은 우선 당성이 강해야 하며 또한 순수한 공산주의자만이 교원후보생이 될 수 있다.

교원들이 혁명화하는 기본방법도 교원조직체 내에서 정치적 조직생활을 우선시 했다. 그리고 당 조직체의 공동생활, 근로단체의 일원으로서 조직생활을 거쳐야 하며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원들은 노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사회주의를 배우기도 하며 사회정치 활동과 과학기술 보급활동, 근로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학교는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세대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원은 그 임무 수행을 철저히

감시 당하고 있다. 당과 학교 교육부는 항상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① 교원의 수업준비와 진행의 관리·감독

② 수업방법의 과학화와 정치적·사상적 내용의 원리 적용 수준

③ 수업방법의 사회주의화 응용 및 개선 정도

④ 학습자의 사상 수준을 평가하여 그 책임을 교원에게 붙는 일

⑤ 학생으로 하여금 교원의 어버이 수령 존경심과 사회주의 사상을 평가하게 하는 일

⑥ 소위 “계몽 학습(세뇌훈련)”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

⑦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비판 능력 등의 평가

이밖에도 교원의 일상 생활이 모두 감시당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교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학교에는 단위 학교 당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에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학교장 이하 모든 교직원, 학생, 학교생활을 감시·감독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통제한다.

① 당의 교육이념 및 교육정책의 관철

②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정치생활 지도감독

③ 학교내에서 유일사상 체계의 정착

④ 학교 내 사회단체사업 지도

이같이 교원들은 당의 철저한 도구이며 하수인이다.

Ⅱ. 통일 대비 교육 과제

1. 민족 공동체 건설

최근 우리의 통일 논의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주된 변화는 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북한주민을 민족적 견지에서 우리와 하나로 연대시키려는 관점에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은 결국 민족공동체건설 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건설 교육이란 한민족이라는 문화적 동질 집단의 연대의식을 토대로 우리 민족 전체의 평화와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곧,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현대사에서 있었던 분단과 갈등을 관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극복함으로써 민족 구성원 전체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과 북,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칠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 같은 언어와 역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함께 지니고 있는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각자는 그가 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간에 남다른 귀속의식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란 의식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이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이요, 갈

라져 있는 남북의 주민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는 가장 큰 명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이야말로 온 민족을 통일 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남과 북의 동포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오백만 해외 동포 모두가 한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우리의 통일은 이러한 민족 공동체 의식의 발양을 원동력으로 삼아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의 성원들을 국경을 넘어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선 둘로 갈라져 있는 남북 사회의 통일은 잃었던 한민족 공동체를 이땅에 다시 일으켜 굳건히 다져나갈 기반이 되는 것이다. 남북한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삶이 회복, 발전되면 세계의 한민족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민족 공동체 건설의 기반은 '민족의 전통 문화'에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 곧 '우리'라는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의해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 건설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문화전통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문화적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한다. 인간을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군사적 통일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남북간에 문화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

연스럽게 남북한 주민을 통합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전통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은 민족 공동체 건설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는 남북문화간에 이질화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 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양측의 문화를 서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교육 부문의 교류와 통합'은 문화적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언어를 재통일하고 전통 문화의 기반을 재확인하고 통일 이후의 생활방식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적 정체성과 통일의지를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 통일의 핵심은 민족 통일이다. 북한주민은 우리와 혈연 뿐만 아니라 문화를 함께 공유한 동포이므로 남이 아닌 우리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더불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야 한다. 동포애는 자연스런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분단된 기간이 길어지고 이질화가 심화되면 망각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각자가 한민족의 일원임을 늘 자각하게 하고,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통일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통일의지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2)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

향후 「민족공동체」형성과 평화통일은 궁극적으로 동질성을 확대하고 이질성을 최소화 함으로써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분단으로 이질화된 파행적인 사회문화구조를 민족의 문화 전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창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한 문화교류의 실천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리적인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로 이룩될 수 있지만 진정한 민족의 화합은 동질성이 회복되고 이질성이 극복되지 못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온데다가 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이 많이 달라져 있어 함께 산다고 하여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통일사회에 접하게 되면 더욱 적용하기도 어렵게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독일이 통일된 후 과거 동서독 국민 모두가 심한 문화의 지체 현상으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우리는 한시 바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화된 요소들을 찾아내서 이를 해소하여 나가는 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공식적인 구조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한계 때문에 이를 조기

에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 정치구조하에서 노동당이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집단주의와 혁명성을 우선하고 있는데 대해, 남한은 민주화된 정치구조하에서 복수정당이 상호 견제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개성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우선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부문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동질적인 요소가 매우 적어 민족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문화에 있어서는 남북이 모두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내면에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민족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에는 아직도 조상숭배의 전통은 남아 있어 장사와 제사를 지내고 묘도 쓰고 있으며 민족의 명절도 지켜오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때 상부상조하는 전통도 지켜오고 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성도 지극하며, 효도하고 우애하는 풍습도 여전히 생활화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지배층 역시 공산화 과정에서 한때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혁명화를 시도 했지만 19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재해석 과정을 통해 충성, 효성, 민족 등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일부 전통문화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조치는 일상 문화생활부문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념·정치 등의 공식적인 부문에서는 한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탈

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이질적인 내용들을 대상으로 삼아 이질성 극복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결부하여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업은 민족의 통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사업과 관련되므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으로부터 빚어진 정체성의 훼손을 냉철하게 비판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되살리는 방향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민주시민 정신 함양

우리 사회는 각기 세계관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과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개방사회이며 다원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성원과 성원사이, 사회집단이나 계층 사이에는 이해가 엇갈리고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효과적인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지 못하면, 국가나 사회가 지향해 나갈 방향

과 목표가 정립될 수 없고, 통일이란 공동의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통일문제는 민족구성원 개개인이나 소속 집단 계층에 따라 이해와 견해가 다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주장도 또한 크게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는 통일에 거는 기대와 가치, 현실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해타산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데 과연 이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대화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통일의 실현이 어렵게 될 것이다.

남북한 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명분이나 이해타산에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합일시키고,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민주시민 정신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태도와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행위규범을 길러주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민주적 태도와 민주시민적 자질의 배양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사회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도울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발생할 갈등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극소화하는데

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민주화의 수준을 더욱 높여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하여 자신과 타인의 주장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적 생활태도의 함양은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부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통일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북한이 처한 국내외 상황을 분석·평가해 볼 때 북한이 전념하여야 할 우선적 과제는 악화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체제 및 정권유지 강화와 자본과 기술도입 등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염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통일을 적극 추진할 여력이 없다. 북한 지도층의 급선무는 체제를 강화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며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일이다. 북한지도층은 동독이 통일과정에서 얼마나 무력했고 철저히 소외되었는지를 보았으며,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부부의 딸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집안을 튼튼히 단속하고 유사한 상황발생

을 방지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남북한 경쟁에서 한국은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 비록 군사면에서 한국이 아직은 수적으로 열세이나, 경제력과 기술 및 대외관계 등에서는 한국이 월등하게 우세하다. 한국은행의 1992년도 한국경제분석에 의하면, 국민총생산 3,057억불(세계15위)에 1인당 국민소득 7,007불(38위)을 기록한 반면에 북한은 국민총생산 211억불(세계 62위)에 1인당 국민소득 943불(88위)에 머물렀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북한의 장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서둘러 개혁 및 개방노선을 택해야 한다. 북한지도층도 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정치적 위험부담때문에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노선 고수만을 역설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노선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여곡절이 있다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자본주의방법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바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체제는 쇠퇴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다원주의를 허용할 수 없으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집단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정한다. 그는 또한 자본주의 방법이나 사유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체제와 이념면의 경직성은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갈등을 빚고 난관을 조성하게 된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서구사회에서 보듯이 공산당의 활동까지도 포용할 수 있지만 당과

수령의 지도를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인민정권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시키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통일은 의지나 열원만 강하다고 달성되지는 않는다. 통일은 일방의 뜻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내에서의 합의도 출조차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설사 지도층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통일이 달성되었다 해도 준비가 미흡했거나 분열이 생기면 다시금 통합이 와해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예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내전상태로 돌입하는 경우까지도 가능해 진다.

20년동안 꾸준히 동독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오던 서독은 기회를 맞아 신속히 통일을 달성하는 기만함을 보였으나, 지난 4년동안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려 왔고, 매년 1,000억불이 넘는 통일비용을 동독지역에 투입하느라고 서독경제가 휘청거렸다. 그래도 서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복지면에서 준비가 잘 된 사례이고, 동서독 통일은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동서독 통일이 우리에게 준 몇가지 교훈은 1) 통일대상인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 2)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과 통일기반의 조성, 3) 엄청난 통일비용 준비 및 최소화 방안 강구, 4)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5)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별 연구 및 통일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내외 상황들의 예견 및 대책강구, 6) 통일에 대한 국내의 합의 도출과 갈등 조정, 7)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

원칙 견지, 8)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추구, 9) 통일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와 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이 어느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일은 21세기 초에나 가능할 수도 있고, 문제투성이의 북한체제가 힘겹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으며, 북한 체제나 정권의 돌연한 붕괴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혼란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

단순화된 이론적 세계와 비교할 때,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개입해 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앞일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사실은 분명해 졌다. 이론적 또는 철학적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주의체제는 수정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놀랄만한 지구력과 활력에 밀려 현실세계에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나마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행운이 온다 해도 포함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통일후 직면하게 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인내심과 이해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준비부터 쌓아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우철, 「분단국의 역사 교과서 비교」. 교학사, 1992.
- 곽병선외,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93.
-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 1993.
-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1988.
- 박덕규, 「통일 후 구동독 시민의 심리적 적응 과정」. 1994,
현장 연구 보고서.
- 박용현, 「세계화 시대 통일한국의 교육이념」.
북한연구소, 「북한 교육론」. 1972, 1978.
- , 「북한총람」. 1983.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 최종민, 「해방 후 북한의 음악」.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2.
- 최영표외,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 통일 연수원, 「북한이해」. 1994, 1995.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신문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1993.
- ,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 분석」. 1991.

- Birgit Rek, Bildungebericht über Nord-Korea. 1992.
- Kim, IL Sung, Thesen zur sozialistischen Bildung.
Phjongjang, 1977.
- Kim, IL Sung, Über Dschutsche in Unserer
Revolution. 1982.

통일교육용 자료(8종)

- | | |
|-------------------------------|-------------------|
| •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 전인영(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 박덕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 이상만(중앙대 교수) |
| •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 이태욱(서강대 교수) |
| •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 이온죽(서울대 교수) |
| •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 한준상(연세대 교수) |
| •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문화·예술인편) | 김문환(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 오문근(경찰대 연구관) |

교직자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

1995年 5月 5日 印刷

1995年 5月 10日 發行

發 行 處 統 一 院

教育弘報局 教育課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電 話 : 7 2 5 - 3 9 4 5

통교 95-4-18

<비매품>